

지역 특화산업이 지역경제 활력 이끈다

동부권 발전사업 평가서, 임실 1위·장수 2위·순창 3위... 지역 강점 살린 특화산업 관광 동반 성장 견인

전북특별자치도는 2026 동부권 발전사업 실적평가에서 임실군이 1위, 장수군이 2위, 순창군이 3위를 차지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임실 치즈, 장수 레드푸드, 순창 발효미생물 등 지역 강점을 살린 식품산업과 관광지원을 연계한 특화산업이 매출·관광 성과로 이어지며 동부권 성장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동부권 발전사업은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전북자치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이다. 지난해 남원·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 등 6개 시군의 17개 사업에 총 300억 원을 투입했다.

이번 평가는 2025년 동부권 특별회계 지원사업 17개를 대상으로 올해 2월부터 진행했다. 전문가와 교수로 구성된 평가단이 시군별 현장점검과 외부 심사를 거쳐 사업 성과와 내부 행정, 개

선 노력 등을 종합 검토했다. 도는 평가 결과에 따라 임실 6억 원, 장수 4억 원, 순창 2억 원 등 총 12억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임실군은 임실치즈식품클러스터 육성사업으로 지난해 매출 470억 원, 방문객 60만여 명을 기록하며 전국 대표 치즈산업 도시의 경쟁력을 입증했다.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으로 육종호출렁다리과 봉어섬 생태공원, 수변데크 등 체험형 관광 기반도 갖췄다. 육종호출렁다리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누적 방문객 176만여 명, 입장 수입 38억 원을 거뒀다.

장수군은 '누리퍼드 농촌관광 활성화 사업'과 '레드푸드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사업'으로 지역 자원을 관광·산업과 연결했다. 동물카리나 등을 도입한 누리퍼드는 가족 단위 체험형 관광지 자리 잡으며 방문객이 2021년

의 8배인 27만여 명으로 늘었고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매출 11억 원을 올렸다.

순창군은 '발효미생물산업 클러스터 고도화사업'으로 전년 목표율 182.8% 초과한 매출 18억 4,000만 원을 기록하며 5년 연속 성장세를 이어갔다. 2024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장담그기 문화를 관광상품으로 활용하고, 지역 중소기업에 1:1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며 산업 고도화 토대를 다지고 있다.

다른 지역도 산업·관광 자원을 발판으로 성장하고 있다. 남원시는 주어식품산업으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누적 매출 570억 원을 올려 '추어거리' 중심의 융복합 식품 관광을 구축했다. 무주군은 남대천 '발발다리' 야간 관광으로 지난해 방문객 42만여 명을 모았고, 천마 가공제품 매출은 2021년 10

억 원에서 지난해 149억 원으로 늘었다. 진안군은 해외 8개소 홍보관 운영 등 명품홍삼 클러스터 사업과 집적화단지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는 앞으로도 동부권 시군의 특화산업 육성과 체험형 관광, 농생명·식품산업 연계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할 방침이다. 시군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으로 사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동부권에서 쌓은 경험을 토대로 서남권까지 균형발전 정책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노홍석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는 "노홍석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는 '그동안 동부권의 특화산업 육성과 관광 기반 확충, 맞춤형 지원을 꾸준히 펼쳐 성장의 토대를 마련해 왔다'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과 자원에 맞는 발전 전략으로 도민이 체감하는 균형발전 성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문성요 새만금개발청장은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투자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간 연결도로, 새만금항 인입철도 등 주요 기반시설 사업 현장 찾아가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새만금 기업 투자 기반시설 현장 점검

문성요 새만금청장, 현대차 그룹 주요 기반시설 사업현장 방문

문성요 새만금개발청장은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투자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간 연결도로, 새만금항 인입철도, 새만금 신공항 새만금 신항 등 주요 기반시설(SOC) 사업 현장을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지역간 연결도로는 새만금 내부용지와 동서도로를 연결하는 핵심 도로로서, 향후 수변도시·산업단지·관광레저용지 등 주요 개발 지역의 접근성을 높이고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기반시설이다.

이번 현장점검은 현대차그룹의 로봇·인공지능(AI)·수소 등 미래 첨단 산업 투자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 점검을 방문해 주요 공정 추진 상황과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200년 개통 목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관리를 당부했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새만금 신공항과 새만금항 인입철도 현황도 함께 살펴며 항만·공항·철도가 연계되는 새만금 트라이포트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지속 강화하기로 했다.

이어 문성요 청장은 해수부가 추진 중인 새만금 신항 현장 찾아가 올해 2선석 개항 준비 상황을 확인하고, 향후 항만 운영과 배후 교통망 간 연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군산=김만호 기자

전북도-순창군-에어로케이, '순창장류축제' 글로벌 성공 도약 맞춘

청주공항 거점 '에어로케이'와 외래 관광객 유치 업무협약 맺어

전북특별자치도와 순창군이 청주국제공항 거점 항공사인 에어로케이(Aero K)와 함께 전북 관광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하늘길 마케팅'에 나선다.

도와 순창군(재)순창발효관광재단, (주)에어로케이는 지난 12일 순창군청에서 '외래 관광객 전북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예비글로벌축제'인 순창장류축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외래 관광객 유입 경로 다변화를 위해 추진됐다. 특히 에어로케이가 보유한 일본(16개 노선), 중국 대만 등 탄탄한 아시아권 네트워크를 전북 관광 수요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협약에 따라 4개 기관은 △전북관광 활성화 위한 공동 사업 추진 △순창장류축제 외래 관광객 유치 공동 기획 및 진행 △에어로케이 주요 취항 국가 대상 전북 관광상품 및 축제 홍보 지원 △항공권 등 활용한 관광객 유치 이벤트 및 경품 제공 등을 추진한다.

에어로케이는 현재 청주와 인천을 기점으로 일본(나리타, 오사카, 후쿠오카 등), 중국(청다오), 대만(타이페이), 베트남(다낭) 등 총 27개 노선을 운영하거나 취항할 예정이다. 도는 이를 통해 인천공항에 집중된 외국인 관광객을 청주공항을 거쳐 전북으로 직접 유입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순창군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순창민의 차별화된 발효 문화와 장류 축제를 해외 시장에 효과적으로 알리고, 청주공항과의 접근성을 활용한 맞춤형 관광 코스를 개발해 순창 장류축제에 외국인 방문객 발길을 높일 계획이다.

신원식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가장 혁신적인 항공사인 에어로케이와의 협력은 전북 관광이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가는 중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에어로케이의 하늘길을 통해 전 세계 관광객들이 순창의 맛과 전북의 멋을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실질적인 상품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순창=이양원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와 순창군, (재)순창발효관광재단, (주)에어로케이는 지난 12일 순창군청에서 '외래 관광객 전북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새만금에 첨단 스마트원예단지 들어선다... 국비 45억 확보

김제시, 농식품부 2026년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공모 선정

총 사업비 65억원·농생명용지 6공구에 부지에 10ha·온실 7ha 조성

전북특별자치도는 김제시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6년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45억 원을 확보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은 대규모 스마트팜 운영에 꼭 필요한 내부도로와 용·배수, 전기 인입, 오폐수처리 시설 등 부지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 선정을 통해 새만금 농생명용지 6공구(원예단지) 일원에 부지면적 10ha, 온실 면적

7ha 규모의 스마트원예단지를 조성한다. 총사업비 65억 원(국비 45억·도비 6억·군비 14억)을 투입해 올해부터 2028년까지 3년간 단지 운영에 필요한 기반을 갖춰 나갈 계획이다.

공모는 전북 김제와 전남 장흥, 경남 거창 등 3개 시군이 신청했으며, 서류·발표·현장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사업비는 연차별 투입 비율(연부율에 따라 2026년 10%, 2027년 30%, 2028년 60%)로 나눠 집행되며, 첫 해인 올해는 6억 5,000만 원이 투입된

다. 재원은 국비 70%, 지방비 30%로 분담한다.

앞서 김제시는 올해 새만금 농생명용지 6-1공구 일원이 지구지정형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로 선정된 바 있다. 6공구 내 기존 단지를 육성지구로 지정받아 △임대형 스마트팜 △농업 스마트업 단지 △세대통합형 스마트농업 단지(스마트APC·가공센터) 등을 각각 조성해 스마트농업 클러스터로 키워 나간다는 구상이다.

특히 6공구는 첨단 원예산업이 이끌 핵심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어, 이번 기반조성을 계기로 스마트팜 입주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이는 새만금이 첨단 농생명산업의 새로운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는 데에도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청년농과 스마트농업 기업의 유입을 앞당기고 생산성 향상과 농업 경쟁력 강화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 달부터 공유재산 심의와 간담회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한 뒤, 9월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맺고 실시설계에 들어간다. 2027년 9월 기반조성 공사에 착공해 2028년 12월 준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김중훈 도 경제부지사는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시설을 차질 없이 구축해 새만금을 첨단농업과 농생명산업을 선도하는 스마트농업 거점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새만금청-국립군산대, K-Sea Food 활성화 방향 논의

공동 세미나 열고 새만금 푸드테크·투자유치 전략 공유

새만금개발청(청장 문성요)은 국립군산대학교(총장 김강주)와 함께 지난 12일 군산대학교 이노테크홀에서 '새만금 수산식품단지 K-Sea Food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전북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과 연계해 추진 중인 '군산형 수산식품 리빙랩 사업'의 일환으

로 마련했다. 참석자들은 새만금 수산식품단지를 국내 대표 수산식품 가공·수출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산·학·관이 모여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데 뜻을 모았으며, 기업 유치와 투자 활성화, 전문인력 양성,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새만금개발청의 '새만금 푸드테크 허브 현황 및 추진 방향' △군산시의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기공 종합단지 현황 및 기업유치 전략' △한국식품클러스터진흥원의 'K-Sea Food 수출 전략 성공 사례'

△군산대학교의 RISE 연계 산학협력 및 전문인력 양성 로드맵 등이 소개됐다.

김민수 사업총괄과장은 "최근 현대자동차의 9조원 규모 투자 발표 등으로 새만금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면서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기공 종합단지 K-Sea Food 산업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기업 투자유치에 적극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이만호기자·군산=김만호 기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제도 개편 시행

연매출 30억원 초과 점포·일부 전문업종 등록 제한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을 정비하고 부정유통 방지 대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며,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영세 가맹점으로 재편하고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행일 이후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 등의 상인이 직접 사업연도 매출액 또는 온누리상품권 환적액이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다.

또한 기존에는 가맹점 등록이 가능했던 병·의원과 한의원 등 보건업을 비롯해 수의업, 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 법무 관련 서비스업,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등 일부 전문업종도 가맹점 등록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가맹점 등록 당시 요건을 충족했다라도 이후 매출액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제한업종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다.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처벌도 한층 강화된다. 부당이득금의 최대 3배 이내 과징금이 부과되며, 가맹점 외 장소에서의 거래, 비대면 결제, 비가맹점 수취 등 일부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북중기청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유효기간 만료를 앞둔 점포를 대상으로 기한 내 갱신 신청을 당부했다.

가맹점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0일 전까지 가능하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방문, 우편·팩스를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다./오상근 기자

1면에 이어... 윤석열, 일반적 징역 30년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권한은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부여된 것"이라며 "그러나 피고인 윤석열은 오히려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사용하기 위해 일부러 국가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 이는 대통령에게 부여된 비상계엄 선포 권한의 목적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의 직권남용 관리행사 방해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작전 실행 지시는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한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서 정한 국군의 사명에 반하여 국군을 동원한 것"이라며 "군인들은 그러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에게 부여된 국군 통수권과 계엄선포권 등의 권한은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돼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은 그와 같은 권한의 목적을 정면으로 일탈했으며,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비상계

엄 상황 조성을 위한 작전을 승인해 범행의 출발점이 됐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한 핵심 실행 책임자"라며 "작전 은폐 범행까지 저질렀고, 자칫 북한과의 무력 충돌로 이어질 위험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여 전 사령관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현직 군인으로서 비상계엄 상황 조성에 가담했다"면서 "그 지위와 관여 정도에 비해 윤석열·김용현의 지시에 수동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 전 사령관의 경우, 작전 은폐를 위해 허위 문서 작성과 기록 삭제 등을 지시한 책임은 인정되나 해당 작전이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목적으로 이뤄졌다는 점까지는 알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또 김 전 사령관이 범행 관련 사실 관계를 대부분 인정했고, 수사 과정에서도 자신이 범위 내에서 진술하려 했으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한 징역으로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